

## “추석 잡아야 뜬다”

지방선거 입지자들 의정보고·출간 등 얼굴알리기 분주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10월 3일) 대목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이를 알리기 위해 출마하는 한편,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살피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을 체육대회와 동문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주요 공략 대상지로 설정하면서 각종 행사장이 물밀 선거전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지역의 A 국회의원은 연말에 발행하던 의정보고서를 앞당겨 제작, 구전(口傳) 효과를 노리고 있다.

A 의원은 “추석엔 가족·친구들이 모여 정치 등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꽃을 피우게 된다”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꽃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를 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도 공식적으로 자신의 공적을 알릴 수 있는 의정보고서를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치인들은 저서 출판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맞서고 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인 B 씨는 “인생 역정과 철학을 담은 저서를 추석 전에 발간할 계획이다”며 “얼굴 알리기에 자서전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입지자들은 “추석 대목은 역시 밭풀이 최고다”며 재래시장과 경로당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지역 시장에 도전하는 C 씨는 최근 지역의 한 인사로부터 관내 행사 리스트를 넘겨받아 익·면 순회

등 얼굴 알리기 일정을 짜고 있다.

광주지역 구청장 입지자 D 씨는 지역에 있는 친·인척을 만나 출마 의사를 전달하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는 ‘1인8표제’ 방식으로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출마자가 격돌하게 된다”며 “선거를 8개월 남겨놓은 이번 추석이 지역 민심을 파악하는 절호의 기회로 출마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추석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디자인비엔날레 “국악과 함께”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씨가 10일 오후 담양 소쇄원에서 열린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0월 11일) 주제전 ‘락(樂)’섹션의 ‘남도 한옥에서 국악 듣기’ 행사 중 최옥삼류 산조를 연주하고 있다.

▶관련기사 2·12면

/위저기자 jwji@kwangju.co.kr

## 호남 광역발전위 사무국 2년마다 이삿짐 쌀 판

### 광주-전북-전남 순 이전 ‘고육책 합의’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호남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을 맡을 사무국 소재지를 둘러싼 갈등 끝에 2년마다 번갈아 사무실을 각 지자체 소재지로 옮기기로 하는 ‘고육책’에 합의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가 선도산업, 선도프로젝트 등 5+2광역경제권 대형 협약을 공동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협화음이 번번이 불거져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개 지자체가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의 소재지를 2년마다 옮기되 첫에는 광주시에 두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광역발전위원회 사무국은 2년 주기로 전북도, 전남도 순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사무국은 매번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과 이전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았다.

3개 지자체는 당초 사무실을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한 곳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전북도가 사무실 유치를 강력히 희망해 논란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의 사무실이 이미 광주에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 광역발전위원회 사무국은 전북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내세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3개 지자체는 5+2광역경제권의 지역 특화산업을 추진하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의 소재지를 놓고도 대립했다. 전북도가 지원단 사무국 유치를 주장,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부의 중재로 광주시 북구 오룡동 테크노파크로 사무실을 정한 것이다.

한 지역 전문가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해 성공을 담당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소소한 사안에서부터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순탄하게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에 광주 북구 첨단 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되는 5+2광역발전위원회 사무국은 광역경제권 사업의 5대 선도프로젝트인 ▲광주 외곽순환도로 개설 ▲호남고속철 사업 ▲여수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서남 해안 연륙교 개설 ▲새만금 개발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실무 기구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간통죄·혼방간 폐지 여부 주목

### 형법 개정시안…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고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는 등 형법 전반을 손보기 위한 법학계의 개정시안이 나왔다.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간통죄와 혼인방지간음죄의 삭제도 시안에 들어 있어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구성한 형법개정연구회는 11일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학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시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이를 참고해 형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학계의 대표적인

사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의 의견이 평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돼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안도 법무부의 최종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안은 강간죄가 여성은 강간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조문을 변경하라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에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만 적용됐다.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제3자의 주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혼인방지간음죄는 남성도 포함하고 있다. 혼인방지간음죄는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조문을 변경하라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에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만 적용됐다.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제3자의

주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혼인방지간음죄는 남성도 포함하고 있다. 혼인방지간음죄는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조문을 변경하라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에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만 적용됐다.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제3자의

### 靑 “신종플루 과민반응 현명한 대응 아니다”

청와대는 10일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과 관련,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감을 버리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7면〉

진영근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발간한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확산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불안감으로 과민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이어 “현재까지 감염된 환자 대다수가 병원이나 자가 격리 치료를 통해 완치됐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신종플루 사망률은 0.4~1%로 여느 계절독감 합병증 수준과 비슷하며, 국내사망률은 0.08%로 더욱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보청기의 자존심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보청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한국인의 청력에 기여를 했고 한국인의 청력을 고민했습니다.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세기보청기



설립연도 1988년  
설립자 김기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화번호 031-218-0110  
팩스번호 031-218-0111